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멕시코




United Mexican States

2022년 3월 14일 | 조사역(G3) 정동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964천 km ² 	인구 1.3억 명 (2021 ^e)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주의 
GDP 1.3조 달러 (2021 ^e) 	1인당 GDP 9,967달러 (2021 ^e) 	통화단위 Peso (Ps) 	환율(U\$기준) 20.27 (2021 ^e) 

- 멕시코는 1.3억 명의 인구와 1,964천 km²에 달하는 영토를 보유한 세계 15위 및 중남미 2위의 경제대국으로 원유, 은, 아연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원유 수출 및 대미 교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과 미국의 대외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 AMLO* 행정부는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긴축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치안, 부패 등 고질적인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으나,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PEMEX 등 주요 국영 기업의 재무상태 악화, 치안 및 부패 문제 심화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AMLO) 대통령은 2018년 12월 1일 6년 임기의 멕시코 대통령으로 취임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이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발효를 통해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무역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반된 에너지 정책 기조, 최근 불법 이민자의 폭증 등 양국 간 갈등 요소가 잠재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2. 1. 26 수교 (북한과는 1980. 9. 19)

주요협정 무역협정('69), 문화협정('69), 사증면제각서교환('79), 항공협정('89),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90), 이중과세방지협약('95), 범죄인인도조약('97), 외교관·관용사증면제협정('97), 관광협력('97), 투자증진·보호협정('02), 세관협력협정('06), 형사사법공조조약('07), 원자력의평화적이용협력협정('13)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출	10,927,016	8,241,006	11,289,115	자동차부품, 철강판,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6,159,866	6,355,879	7,887,963	원유, 기타금속광물, 자동차부품

해외직접투자현황(누계, 2021. 9월 말) 451건, 6,563,601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e
경제성장률	2.1	2.2	-0.2	-8.3	6.2
소비자물가상승률	6.0	4.9	3.6	3.4	5.4
재정수지/GDP	-1.1	-2.2	-2.3	-4.5	-4.2

자료: IMF, EIU

플러스 경제성장 지속 전망에도 투자심리 위축 등 위험요인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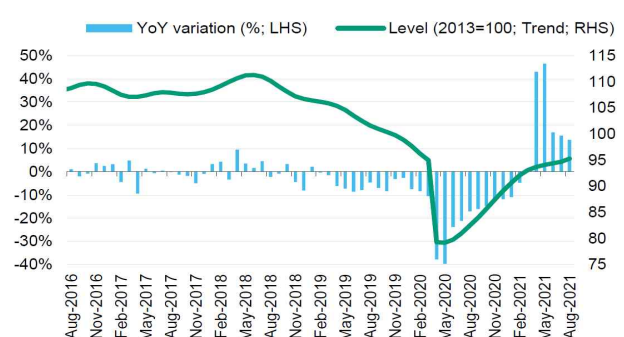
- 2021년 멕시코 경제는 글로벌 공급 차질 및 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제조업 회복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기저효과, 최대 교역국인 미국의 경기 회복,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내수 증대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인해 6.2%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회복한 것으로 추정됨.
- 멕시코 통계청(INEGI)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멕시코는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전분기 대비 1.2%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뒤이은 3, 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각각 -0.4%, 0%를 기록하며 기술적 침체를 가까스로 모면함. 이는 코로나19 상황 악화, 공급 차질에 따른 관련 산업군 성장 둔화, 아웃소싱 금지법 전면 적용(2021. 9월)에 따른 서비스업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 2022년에는 경제 재활성화 확대 및 미국의 인프라 패키지(1.2조 달러 규모) 추진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 등으로 인해 플러스 경제성장을 유지하겠으나 전 세계적인 오미크론 확산과 국경 폐쇄, 정부 주도적 정책 지속에 따른 민간 투자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6.2%)보다 성장세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 EIU(2022. 2월)는 2021년 하반기 성장 추이를 고려하여 2022년 멕시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1.9%로 하향 조정하였음. AMLO 행정부가 2020~21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여타 국가 대비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의 경기부양책을 고수함에 따라 멕시코 가계·기업의 항상소득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멕시코의 저성장 전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그 외에도 저조한 공공투자, 높은 빈곤율, 열악한 치안환경 등이 성장 제약 요인으로 분석됨.

[그림 1] 멕시코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Bloomberg

[그림 2] 멕시코 총고정자본형성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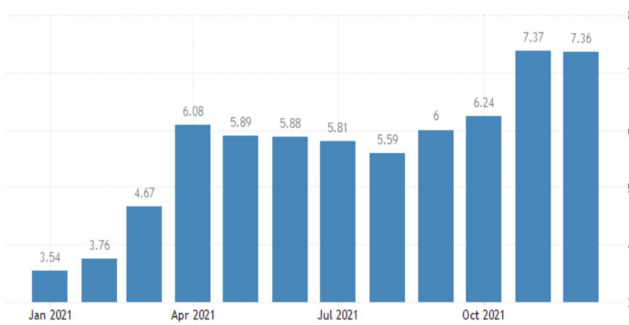
자료: Haver, Moody's

국내경제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 내에서 관리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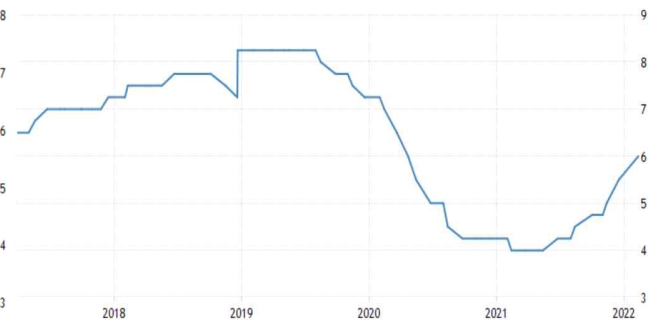
- 2021년 멕시코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4%를 기록하며 멕시코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3±1%)를 상회함.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생산·물류 차질 등으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 심화된 데 기인함.
- 특히 2021년 1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최근 20년 사이 최고치인 7.37%를 기록하였고, 뒤이어 12월에도 7.36%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유지함. 이를 품목별로 분석하면, 에너지(11.5%), 식료품 및 담배(8.1%), 주거(2.5%) 순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임.
- 멕시코 중앙은행은 이에 대응하여 2021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200bp의 기준금리 인상(4%→6%)을 단행하였으나,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음. 2022년 말까지 주요 소비자물가 상방 요인인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해소될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신뢰성을 기반으로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 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전망됨.
- Fitch Solutions(2022. 1월)에 따르면, 멕시코 중앙은행은 1982년 모라토리엄 선언 및 1994년 '데킬라 위기'(폐소화 폭락, 대규모 자금이탈로 인한 외환위기) 등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며 통화정책 신뢰성을 확보해왔음. 그러나 2021년 11월 AMLO 대통령이 중앙은행 총재 지명자를 돌연 교체하면서 폐소화 가치가 2% 넘게 급락하는 등 시장이 크게 동요하였으며, 향후 정부의 개입으로 중앙은행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
- 다만, Oxford Economics(2022. 2월)에 따르면 미 연준의 매파적 성향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함을 고려하여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2023년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할 가능성도 있음.

[그림 3] 멕시코 월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자료: INEGI, Trading Economics

[그림 4] 멕시코 기준금리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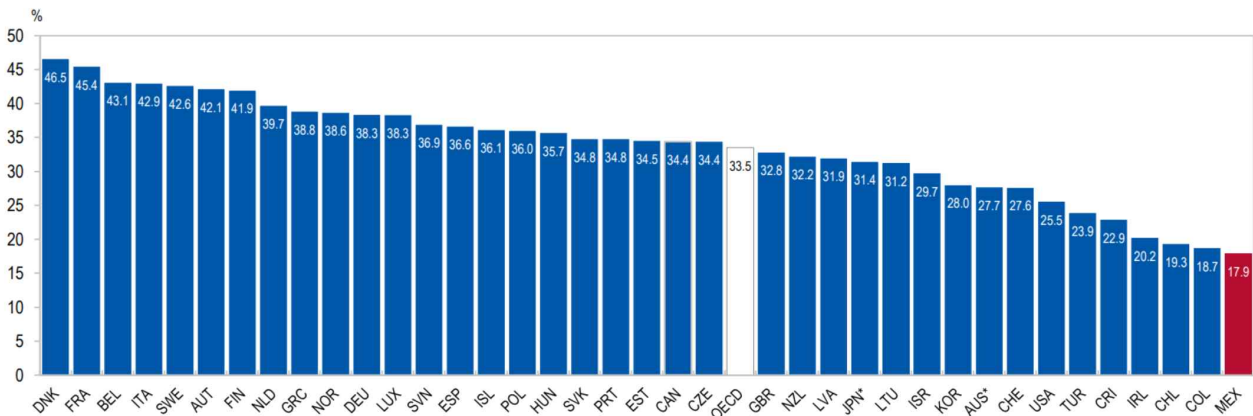
자료: 멕시코 중앙은행, Trading Economics

국내경제

PEMEX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지원과 낮은 세입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위험요인으로 작용

- AMLO 행정부는 2018년 취임 이후 공적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긴축 재정정책을 고수해왔으며,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다소 미온적인 수준의 경기부양책(GDP의 1.9%)을 실시하였음. 이에 재정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여타 인접국과 비교하여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국영 석유기업 PEMEX에 대한 금융 지원을 지속해온 점, GDP 대비 세입 비중(17.9%)이 OECD 평균(33.5%)에 비해 다소 낮은 점 등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위험요인으로 간주됨.
- 2021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4.2%로 전년(-4.5%)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이는 멕시코 국세청(SAT)의 탈세 추징 강화, 민간소비·투자 회복에 따른 세입 증가 등의 재정수입 증가 요인과 PEMEX 앞 금융지원 지속, 보건지출 및 공공투자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됨.
- 2021년 9월 8일 멕시코 재무부가 하원에 제출한 2022년 멕시코 예산 및 조세 개혁안에 따르면, 2022년 연방지출예산 규모는 사상 최고 수준인 7.08조 페소로 전년 대비 8.6% 증가하였음. AMLO 행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 및 조세 회피 최소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이에 2022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3.5%로 전년(-4.2%)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PEMEX 앞 막대한 예산 투입 및 채무 경감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 2022년에도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됨.
- Moody's(2021. 11월)에 따르면, PEMEX에 대한 금융지원은 연금 지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마야 열차, 도스 보카스 정유소 등) 투자와 함께 정부에 의해 이미 수년 간 계속되어 현재 시점에서 감축하기 어려운 단계에 놓여 있음. 이는 예산지출의 경직성(rigidity)을 강화하여 향후 멕시코의 재정부담 해소를 어렵게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Fitch Solutions(2022. 1월)에 따르면, 멕시코 당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AMLO 행정부는 증세보다 세제 간소화 및 탈세 방지에 더욱 주력하고 있어 향후 총체적인 세입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그림 5] 2020년 멕시코 등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세입 비중(%)



자료: OECD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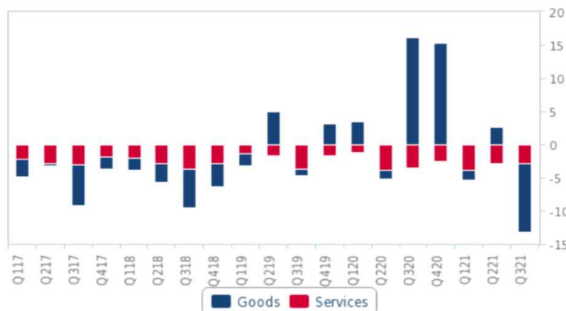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e
경상수지	-20,417	-25,125	-3,971	26,179	-5,211
경상수지/GDP	-1.8	-2.1	-0.3	2.4	-0.4
상품수지	-10,984	-13,768	5,167	33,979	-12,003
상품수출	409,806	451,082	460,939	417,151	493,481
상품수입	420,790	464,850	455,772	383,172	505,484
외환보유액	164,892	165,197	170,580	184,175	180,766
총외채	436,562	455,828	472,378	467,512	473,869
총외채잔액/GDP	37.7	37.3	37.2	43.5	36.9
D.S.R.	12.5	10.8	12.5	12.8	9.5

자료: IMF, EIU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전환

- 2020년 멕시코의 상품수출과 상품수입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무역환경 악화로 동반 감소하였으나, 상품수입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면서 오히려 상품수지가 개선되어 멕시코는 32년 만에 GDP 대비 2.4%의 경상수지 흑자 전환을 기록함. 그러나 20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와중에도 경제활동의 부분적 정상화로 상품수입이 회복되어 경상수지가 다시 GDP 대비 -0.4%의 적자 전환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22년에는 내수 회복에 따른 상품수입 증가 및 멕시코 내 다국적 기업의 본국 해외송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0.4%) 대비 악화된 -1.4%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EIU(2022. 2월)에 따르면 중기적 관점에서 멕시코는 2026년까지 평균 -1.4%의 구조적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그림 6] 멕시코 분기별 상품·서비스 수지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멕시코 중앙은행, Fitch Solutions

[그림 7] 멕시코 월별 상품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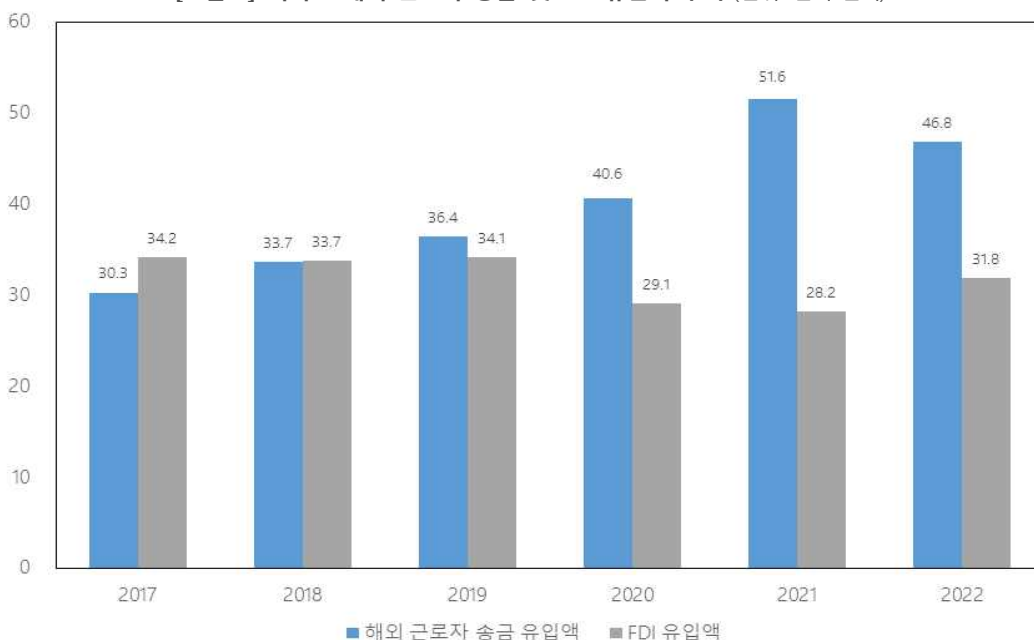
자료: INEGI, Trading Economics

대외거래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액 최고치 경신,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외환보유액은 소폭 감소

-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액은 멕시코의 주요 외화수입원으로, 2021년에는 전년(406억 달러) 대비 27.1% 증가한 516억 달러가 유입되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함. 이는 전체 송금 유입액 중 약 95%를 차지하는 미국의 경기부양 기조가 2021년에도 이어진 데 기인하며, 미국 내 멕시코 이민자의 실업수당 확보, 미국의 고용 회복, 코로나19로 인한 멕시코 이민자의 소비 감소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다만, 2022년에는 미 연준의 테이퍼링(Tapering) 실시 및 경기부양책의 부분적 축소, 미국의 경기 회복세 둔화 등으로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액이 전년(516억 달러)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2021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FDI 둔화, AMLO 행정부의 국가 주도적 정책 실시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 등으로 인해 전년(291억 달러) 대비 3.2% 감소한 282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또한 EIU(2022. 1월)에 따르면, 2022년에는 글로벌 투자심리 회복에 따라 FDI 유입액이 318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피터슨경제연구소(PIIE)와 한국무역협회(2021. 9월)에 따르면, 멕시코는 매력적인 니어쇼어링(Nearshoring, 인접국에서 이루어지는 아웃소싱) 허브로서 거론되고 있으나, 당국의 기업 규제, 불규칙한 전력 공급, 부실한 도로 및 철도 인프라 등의 요인이 대 멕시코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에 2021년 멕시코는 상품수지 적자, FDI 유입액 감소 등으로 전년(1,842억 달러) 대비 약 2% 감소한 1,808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멕시코의 2021년 월평균수입액의 3.7개월분에 해당함. EIU(2022. 2월)에 따르면, 향후 2026년까지는 월평균수입액의 4개월분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그림 8] 멕시코 해외 근로자 송금 및 FDI 유입액 추이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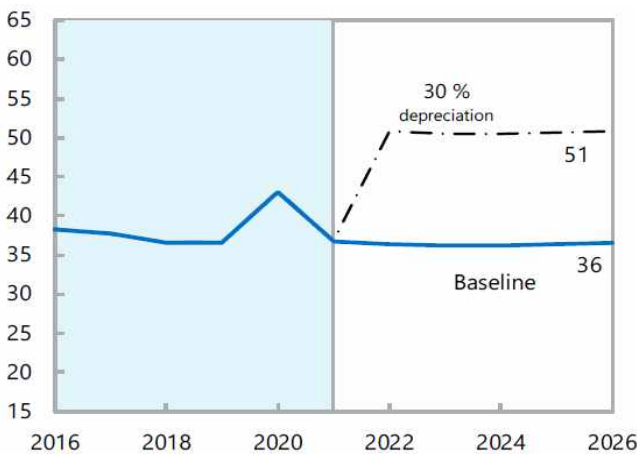
자료: 멕시코 중앙은행, UNCTAD, EIU. 2021년 FDI 유입액은 추정치이며, 2022년 해외 근로자 송금 및 FDI 유입액은 전망치임.

외채상환능력

코로나19 위기에도 외채 관련 지표는 양호한 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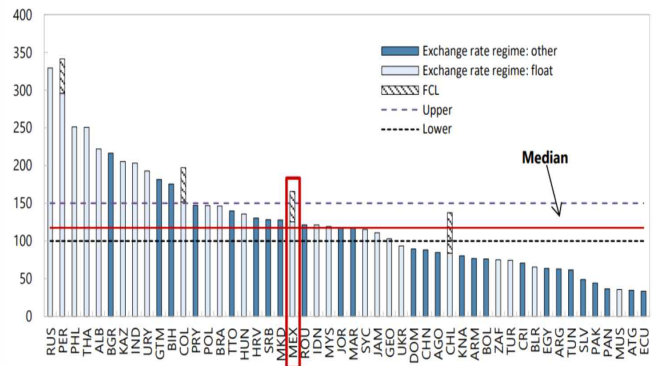
- 2021년 말 멕시코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경기 회복에 따른 GDP 증가로 전년(43.5%) 대비 감소한 36.9%를 기록하였으며, D.S.R. 역시 역내 주요국들이 30~40%대를 기록한 데 비해 9.5%를 기록하는 등 외채 관련 지표들이 비교적 양호함.
- 2022년에는 단기적으로 폐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외채상환 비용 증가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멕시코의 양호한 외환보유액 수준과 신뢰성 있는 재정정책 등을 고려하면 동 요인이 멕시코의 외채상환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IMF(2021. 11월)에 따르면, 멕시코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26년까지 약 36%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나, 폐소화가 30% 평가절하될 경우 동 비중은 51%까지 상승할 것으로 관측됨.
- 또한, 2009년 4월 17일 IMF가 멕시코 앞 470억 달러 규모의 신축적 신용공여 한도(Flexible Credit Line, 이하 "FCL")를 승인한 이후, 멕시코는 IMF와의 협상을 통해 동 한도를 꾸준히 갱신하며 꼬리위험(tail risk,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발생시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위험)에 대한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해왔음.
- 2021년 11월 19일 IMF는 FCL 금액을 61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감액한 2년 연장안을 승인하였으며, 멕시코가 변동환율제, 신뢰성 있는 인플레이션 목표제,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Law), 바람직한 금융규제 등 효과적인 제도 및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평가함. 다만, 멕시코 경제가 선진국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 상승 및 예상보다 빠른 통화정책 정상화 실시 등의 대외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우려함.

[그림 9] 멕시코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IMF

[그림 10] 2020년 멕시코 등 주요 국가별 외환보유액 수준 (IMF 기준 적정 외환보유액 대비, %)



자료: IMF

구조적취약성

경제의 높은 대미 의존도 및 수출 산업의 편중

- 멕시코 중앙은행에 따르면 미국은 2021년 7월 누계 기준 멕시코 수출의 80%, 수입의 44%를 점유하며, 멕시코의 2021년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액 중 95%가 미국에서 발생한 것임. 또한 멕시코 경제부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누계 기준 멕시코 FDI 유입액의 51%가 미국으로부터 유입됨. 미국의 거시경제 동향 및 대외정책 방향은 멕시코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높은 대미 의존도는 전통적으로 멕시코의 주요 취약점으로 여겨짐.
- 국가별 멕시코 FDI 유입 비중(2021년 상반기 누계) : 미국(51%), 스페인(9%), 영국(6%), 독일(6%) 등
- 또한, 멕시코 중앙은행에 따르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계류, 전자기기가 2021년 7월 누계 기준 멕시코 수출의 58%, 수입의 44%를 차지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충격이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KOTRA(2021. 8월)에 따르면, 멕시코는 세계 4위 자동차 수출국(전 세계의 6.2%)으로 대부분의 글로벌 완성차 기업 및 계열사들이 멕시코에 진출해 있음.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88%는 수출용이며, 이 중 약 80%가 미국으로 수출됨.

원유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국제유가 변동에 대응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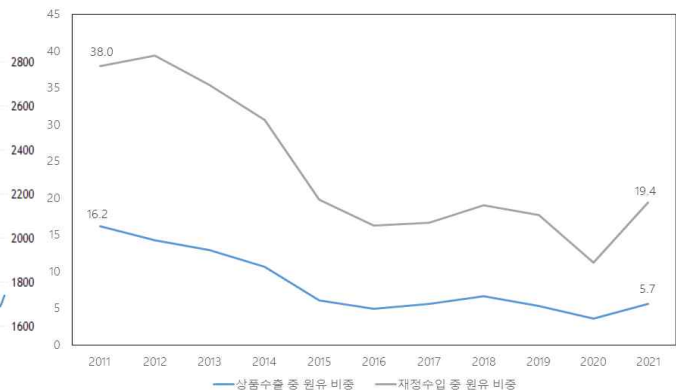
- 멕시코는 중남미의 대표적인 산유국임. 2004년 이후 원유 수요 및 멕시코 내 원유 매장량 감소 등으로 인해 멕시코의 원유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수출액 및 재정수입 측면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감소해 왔으나, 멕시코는 여전히 2021년 10월 기준 세계 13위(중남미 2위) 규모의 원유(173.1만 배럴/일)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가경제 전반이 국제유가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함.
- 이에 멕시코 재무부는 연간 Hacienda Hedge(유가 급락에 대비하여 미국 월가 투자은행에서 원유 풋 옵션 매입) 계약을 통해 유가 하락 위험을 관리하며 원유 관련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있음.
- Bloomberg에 따르면, 멕시코는 동 헤지 계약을 통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5년 유가 폭락,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도 각각 51억 달러, 64억 달러, 24억 달러의 수익을 얻었음.

[그림 11] 멕시코 원유 생산량 추이 (단위: 천 배럴/일)



자료: EIA, Trading Economics

[그림 12] 멕시코 상품수출 및 재정수입 중 원유 비중 (단위: %)



자료: EIU, 멕시코 중앙은행

구조적취약성

자유변동환율제의 안정적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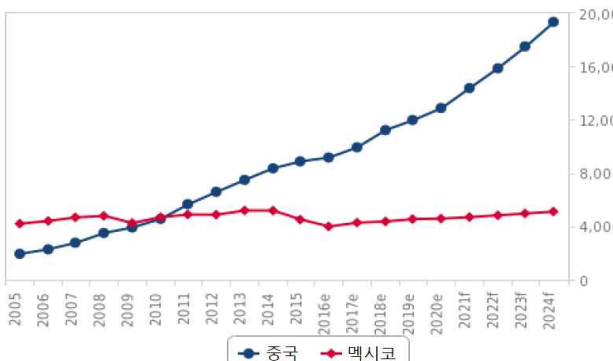
- 멕시코 경제는 자유변동환율제와 물가안정목표제를 기반으로 한 신뢰성 있는 거시경제정책 구조를 강점으로 확보하고 있음. 특히 IMF(2021. 11월)에 따르면, 자유변동환율제의 안정적 운용은 멕시코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등 외부충격을 신속하게 흡수하고 회복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이 과정에서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에 직면하였으나, 적절한 외환시장 개입을 바탕으로 변동성을 일부 완화한 결과 2021년 평균 페소-달러 환율(USD/MXN)은 2019년 평균 대비 5.2% 상승하여 주요 중남미 국가 대비 양호한 성과를 보임.
- 주요 중남미 국가의 2019년 대비 2021년 평균환율 상승률(IFS) : 브라질(36.8%), 페루(20.5%), 콜롬비아(14.1%)

성장잠재력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변화 속 역할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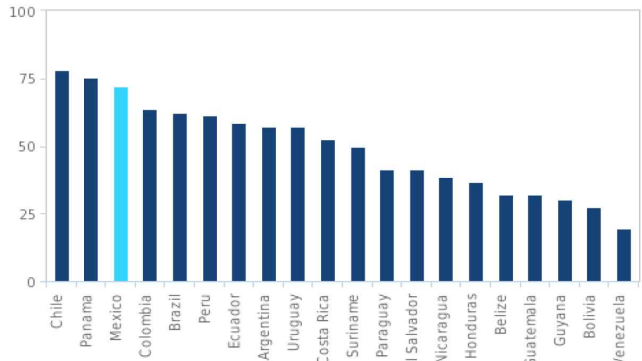
- 현재 글로벌 가치사슬(GVC)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산 제품 수급 차질 등으로 중국과의 탈동조화(China Decoupling), 니어쇼어링, 공급망 단위의 분산화 등의 변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미주 대륙의 중심에 위치한 멕시코가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음.
- KOTRA(2022. 1월)에 따르면, 멕시코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국경을 공유하고 있어 육로운송 시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며, 유럽 및 아시아로의 해상운송에도 지정학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
- 멕시코는 이미 2018년부터 공급망에서 중국을 대체해 왔으며, 미·중 갈등 심화, 저임금 구조 유지, USMCA 발효에 따른 역내 주요 공급망 역할 강화 등의 영향으로 미-멕시코 간 니어쇼어링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Fitch Solutions(2022. 1월)의 물류 위험지수 평가에 따르면, 멕시코는 중남미 20개국 중 '교역 절차 및 지배구조' 부문에서 72.2점으로 3위, '연결성' 부문에서 76.3점으로 2위를 기록하였음. 멕시코는 높은 연결성, 우수한 교통망 및 국경세관 인프라 등으로 수출입 리드타임 단축에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음. 다만, 관료주의, 부정부패 등으로 인한 높은 교역비용은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함.

[그림 13] 중국·멕시코의 제조업 근로자 1인당 연평균 임금(달러)



자료: National sources, Fitch Solutions

[그림 14] 중남미 주요 국가별 교역 절차 및 지배구조 부문 위험지수



자료: Fitch Solutions (0~100점, 지수가 낮을수록 위험이 높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정책성과

전력산업법 및 탄화수소법 개정 등 국영 기업의 에너지 독점화 정책 지속

- 2018년 12월 출범한 AMLO 행정부는 에너지 민영화를 추진했던 페냐 니에토 전 행정부와 달리 에너지 산업의 국가 주도적 개발을 지속하며 국영 전력기업 CFE와 국영 석유기업 PEMEX의 권한을 강화해 왔음. 2021년 9월 8일 멕시코 재무부가 하원에 제출한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CFE와 PEMEX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각각 7.7%, 16.8% 증가하여, 금년에도 국영 에너지 기업 앞 지원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전력산업법)** 2021년 3월 9일 발효된 개정안은 CFE 발전 전력을 우선 공급함으로써 현지 외국계 글로벌 에너지 기업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고자 하였으나, 공정거래 위반 및 독과점으로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음. 이후 9월 30일 AMLO 대통령은 동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하원에 제출하였으나, CFE의 전력시장 점유율을 최소 54% 이상 독점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에 따른 대내외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 **(탄화수소법)** 2021년 5월 5일 발효된 개정안은 PEMEX 주도의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공정거래 위반 및 독과점 가능성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법안 검토가 진행 중임. 특히 동 개정안에는 정부에게 국가 안보, 에너지 안보 및 경제 안보의 사유로 사업 허가증의 효력 정지를 언제든지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됨.
- 한편, 2021년 12월 28일 옥타비오 로메로 PEMEX 최고경영자는 PEMEX의 주요 10대 중점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2023년부터 원유 수출 전면 중단을 선언함. PEMEX 측은 자체 정유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 밝혔으나, 동 조치는 AMLO 행정부의 '에너지 주권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임. 한국수출입은행 멕시코시티사무소(2022. 1월)에 따르면, 향후 멕시코 정부의 에너지 시장 再독점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멕시코 정부의 이와 같은 에너지 독점화 시도는 향후 멕시코의 국제신인도 하락 및 정부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022년 1월 21일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멕시코의 전력산업법 개정 조치가 미국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힘. 민간 발전소의 판매량을 제한하고 CFE 발전 전력을 우선시하는 내용은 USMCA에 규정된 자국 기업에 대한 우대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어 향후 분쟁이 예상됨.

아웃소싱 관련 노동법 개정

- 2021년 9월 1일 전면 적용된 노동법 개정안은 공공 및 민간 분야 아웃소싱을 금지하며, 일부 전문 서비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국가제조산업협회(Canacintra) 등은 동 개정안이 아웃소싱 제도의 자유로운 활용을 제한함으로써 고용 창출이 저해될 것을 근거로 우려를 표한 반면, 멕시코 노동부는 아웃소싱 금지 계획을 발표한 이후 약 30만 명의 아웃소싱 노동자가 직고용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발표하면서 동 개정안이 균형적인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밝힘.
- KOTRA(2022. 1월)에 따르면 동 개정의 표면적인 목적은 멕시코 노동자의 권리 신장이나, 실질적으로는 아웃소싱에 따른 탈세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됨.

정치안정

불평등, 부패 및 치안 상황 악화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 심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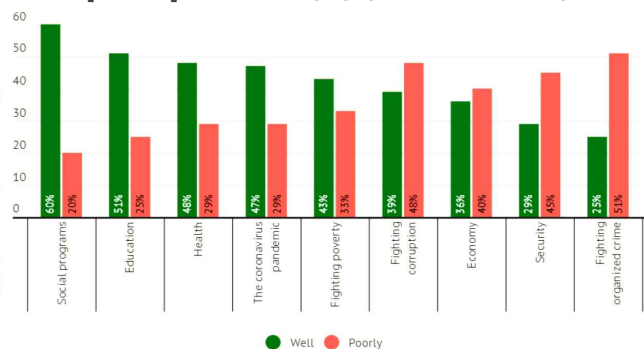
- 멕시코의 여론조사기관 Oraculus 및 AS/COA에 따르면, AMLO 행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2019년 2월 81%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2020년 8월 코로나19에 따른 심각한 경기침체로 59%를 기록한 이후 2022년 1월 현재까지 60%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함.
- 2021년 6월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국가재건운동(MORENA)를 주축으로 하는 좌파 선거연합(Juntos Hacemos Historia)이 하원에서 개헌 가능선(전체 의석의 2/3) 확보에 실패하며 임기 후반 국정 동력이 다소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AMLO 행정부는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토대로 주요 개혁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EIU(2022. 2월)에 따르면, AMLO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미숙, 대내 구조적 문제 해결 실패 등에도 불구하고 60% 이상의 높은 국정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야당이 현 정부의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viable) 정치적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AMLO 행정부의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범죄, 소득 불평등, 빈곤 등 고질적인 사회 문제는 지속적으로 멕시코의 정치환경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12월 현지 일간지 Reforma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AMLO 행정부의 주요 현안 대응 평가 중 '사회 보장 프로그램'과 '교육' 부문에 대해서는 각각 응답자의 60%, 51%가 '긍정'으로 답변하였으나, '치안', '부패' 및 '조직적 범죄 대응' 부문에 대해서는 각각 응답자의 45%, 48%, 51%가 '부정'으로 답변하였음.

[그림 15] AMLO 행정부 지지율 추이 (단위: %)



자료: Oraculus, AS/COA

[그림 16] AMLO 행정부의 주요 현안 대응 평가



자료: Reforma, AS/COA. 2021년 12월 여론조사

사회안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개도국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 Moody's(2021. 11월)는 ESG 요소가 멕시코의 정부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Moody's(2021. 11월)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7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7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19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1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극심한 기후변화에 노출되어 여행수요 감소, 긴급 재난지원, 재해 대비 지출 등이 멕시코의 지방재정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나, 멕시코 경제의 규모 및 다양성을 고려하면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다만, 멕시코 정부와 국영 석유기업 PEMEX 간의 높은 상호의존도로 인하여 중장기적으로 저탄소 전환에 따른 리스크가 상존하므로,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멕시코는 자국민들에게 교육, 주택, 보건, 안전 등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간 폭력범죄가 급증하여 치안이 악화되고 있음. 또한, 인구 고령화 추세에도 이를 뒷받침할 사회보장기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향후 관련 문제에 직면할 것이 우려되어, 사회(Soci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멕시코는 거시경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해 온 국가이나, 의사결정 과정의 비일관성이 심화될 경우 향후 투자 전망 악화 및 정부의 충격 대응능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물론 멕시코 중앙은행의 신뢰성 있는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부정부패 등 후진적인 법치주의로 인해 지배구조(Governance)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열악한 치안, 부정부패 등 후진적인 법치주의

-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2021 법치주의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의 법치지수는 0.43점으로 세계 139개국 중 113위(중남미 32개국 중 27위)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0.47점)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임. 부문별로는 부패(135위), 질서 및 안전(130위), 민사 사법제도(131위), 형사 사법제도(129위) 등이 최하위권에 머무름.
- '부패' 부문에서는 입법부의 부패(0.10점), '질서 및 안전' 부문에서는 폭력을 통한 고충 해결(0.23점), '민사 사법제도' 부문에서는 불합리한 지연(0.23점), 그리고 '형사 사법제도' 부문에서는 효과적인 수사의 부재(0.19점)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멕시코 국가공공안전사무국(SESNSP)에 따르면 2021년 멕시코에서 발생한 살인범죄의 피해자 수는 전년 대비 1.93% 감소한 28,230명을 기록하였으나, 공갈범죄 건수는 총 8,827건으로 전년 대비 10.89% 증가함. IHS Markit(2022. 1월)에 따르면, 최근 추세를 고려할 때 2022년에는 영리 목적(for-profit) 범죄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국제관계

미-멕시코 국경 지대의 안전 문제 지속

-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21년 1월 취임 직후 곧바로 미-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하였음. 또한 미-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이민자들로 하여금 멕시코에 머무르도록 하는 '멕시코 잔류' 정책(이민자 보호 의정서, 이하 "MPP")을 폐지하는 등 포용적인 이민정책을 실시함. 이에 미-멕시코 국경지대에는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들이 몰림.
-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2020년 10월~2021년 9월 미-멕시코 국경에서 적발된 멕시코 불법 이민자 수는 총 655,594명으로 전체 불법 이민자의 38%를 차지하며 전년(297,711명) 대비 2배 이상 폭증함. 또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Unaccompanied Children) 수도 25,697명으로 전년(16,292명) 대비 57.7% 증가함.
- 이후 2021년 8월 텍사스 주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미 연방 대법원이 MPP를 원상 복구하라고 판결하였고, AMLO 행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MPP가 2021년 12월부터 재실시되며 논란이 됨. 다만, AMLO 행정부의 인도주의적 요청에 따라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및 임산부, 심신 미약자, 노인, 성소수자 등에게는 MPP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민자들의 안전을 위해 잔류 동안의 망명 심사는 180일 이내에 마무리되어야 함.
- 불법 이민자 행렬에 따른 미-멕시코 국경 지대의 안전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바이든 미 행정부는 AMLO 행정부와 국경 안전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건설적인 관계를 모색하고 있어 향후 국경 안전 제고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12월 1일 미 국제개발처(USAID)와 멕시코 국제협력기구(Amexcid)는 미-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수가 최근 들어 급증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3개국을 대상으로 불법 이민 발생 요인의 해소를 위한 합동 프로젝트(Planting Opportunities)를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온두라스의 위기청소년 50만 명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미국과는 상반된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른 갈등 우려

- AMLO 행정부는 실리를 위해 외교관계 및 국제협력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우호적인 양자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상반된 기조를 보임.
-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 캠페인 때부터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강조하며 20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그린뉴딜 정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AMLO 행정부는 PEMEX, CFE 등 국영 에너지 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미국 에너지 기업의 멕시코 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있어 양국 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다만 S&P 글로벌 플래츠(2022. 2월)에 의하면, 데이비드 골드윈 애틀랜틱 에너지 자문그룹 의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멕시코의 에너지 정책이 현재 이민 문제만큼 미-멕시코 양자관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지는 않다는 시각을 피력함.

외채상환태도

증장기 위주의 외채구조와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2021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멕시코에 대한 여신잔액 150.43억 달러(단기 61.60억 달러, 중장기 88.83억 달러) 중 연체액은 2.44억 달러로 1.6%에 불과하며, 외채의 59.0%가 증장기 외채로 안정적인 외채구조를 지니고 있음.
- 다만, 전년 동기 연체액 비중(0.9%)과 총외채 대비 증장기 외채 비중(66.9%)에 비하면 외채구조의 안정성이 소폭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2021.10)	3등급(2020.10)
Moody's	Baa1(2021.04)	Baa1(2020.04)
Fitch	BBB-(2021.11)	BBB-(2021.05)

국가신용등급은 양호, 국제신용평가사의 평가등급은 2020년 4월 이후 유지

- 멕시코는 2009년 이후 OECD 3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는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사태 및 국제유가 폭락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와 대외 리스크 증가를 근거로 멕시코의 국가신용등급을 일제히 한 단계씩 하향 조정한 이후 2022년 3월 현재까지 유지 중임.
- Moody's는 2021년 11월 18일 Credit Opinion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멕시코의 공공재정 악화 정도가 여타 국가에 비해 양호한 편이었으나 PEMEX 앞 지속적인 금융지원 등을 우려하며 기존 Baa1 등급 및 '부정' 전망을 유지함.
- 또한, Fitch는 2021년 12월 1일 Rating Report에서 멕시코 정부의 경제정책의 신뢰성, 안정적인 공공재정에도 불구하고 PEMEX 앞 지속적인 금융지원, 여타 국가 대비 저조한 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기존 BBB- 등급 및 '안정' 전망을 유지함.

- 2021년 멕시코 경제는 코로나19 기저효과, 미국의 경기 회복,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내수 회복 등에 따라 6.2%의 플러스 성장을 시현하였음.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도 전년(-4.5%) 대비 소폭 개선된 -4.2%를 기록하였으나, PEMEX 앞 지속적인 금융지원과 낮은 세입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18년 12월 출범한 AMLO 행정부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여력 확보, 사회적 측면에서는 부패·치안 문제 개선을 표방하였으나, 국영기업 앞 과도한 자본 투입, 치안환경 악화 등에 따라 정책성과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비록 2021년 6월 중간선거에서 여당 MORENA 주도의 선거연합이 개헌 가능선 확보에 실패하였으나, 60%를 상회하는 국정 지지율을 고려하면 AMLO 행정부의 정치적 지지기반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됨.
- AMLO 행정부는 바이든 미 행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USMCA 발효에 따른 경제적·외교적 성과를 실현하고자 할 것이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상반된 입장 등으로 인한 갈등이 우려됨.